

남북경협 현황과 금후 전망

김창권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박사

지나간 94년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사망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2세대를 예고하는 중대 전환점일 것 같다. 광복과 분단 반세기를 맞은 95년에 남북경협에 거는 기대는 지면이 좁아 이루어 다 형용치 못할 정도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년 국정과제 연설에서 통일경제 대비가 국정 운용의 한획으로 설정되었고, 이홍구 총리는 금년에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의연하게 북측의 호응을 유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 경수로 지원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과 주장이 최대한 관철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진전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자신만만한 남북경협에 대한 청사진과는 달리 북한측의 반응은 이른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거부로 일축하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을 향하여서

는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며 범민족 대회를 주창하는 등 손을 흔들고 있다. 더욱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의 진의를 쉽게 파악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우리측이 거는 기대와 앞일을 쉽게 예측키 어려운 북측의 상황이 어우러 어떠한 95년도의 남북경협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우선 남북경협의 메카니즘을 이해해 보고 94년의 현황을 간략히 기술한 후 95년도를 전망하기로 한다.

I. 남북경협 결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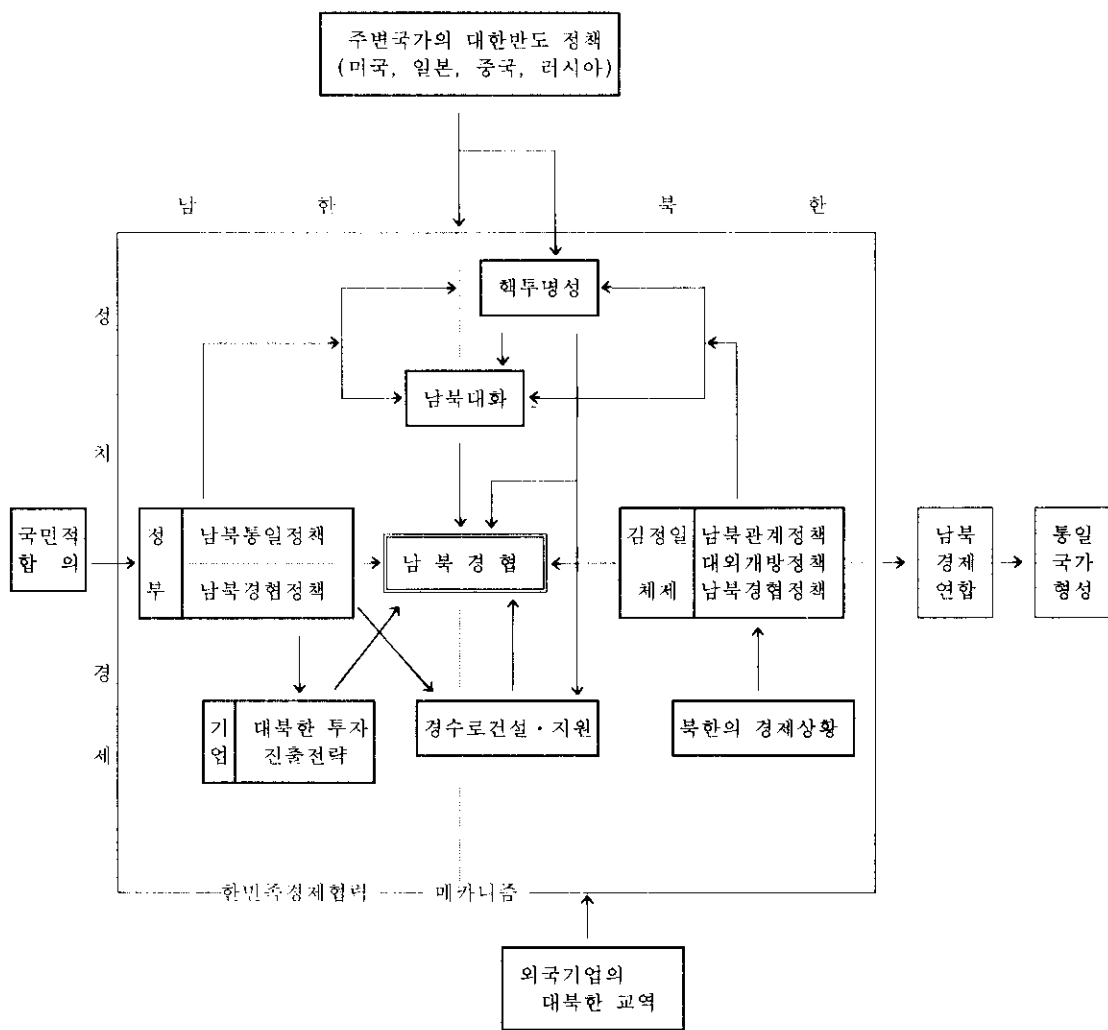
남북경협의 향방은 단순하게 예측될 수 없다는 것이 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대변해 준다. 경제적 측면의 남북경협은 경제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그 방향 및 발전 가능성을 결정해 준다. 또한 남북한 당국간의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미

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남북경협을 촉진시키는 보완 효과를 주기도 하며 반대로 저해시키는 대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남북경협의 주요 결정 요인을 차례로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① 정부의 통일·경협정책

지난 해 11월 8일 정부는 기업인 방북, 국내 기업의 북한 사무소 설치 및 대북 시범사업 등을 허용하고 위탁가공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이른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여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경협에 전환점을 마련해

<그림> 남북경협의 주요 결정 요인



주었다. 이는 북미회담 타결 이후 '핵우선 대북 정책'을 수정하고 북핵문제로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를 경협으로 정부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북 경수로 지원 및 북한과 관련국간 관계 개선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북경협을 검토, 진전시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취했어야 하는 조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 조치에서 취한 기초를 계속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즉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위탁가공 활성화 처럼 성사 가능한 협을 우선으로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대북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되, 본격적 경협은 향후 남북대화의 추이에 따라 상황적으로 대처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중심의 대북 경협을 추진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북핵 활동 투명성 보장 및 경수로 건설을 중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대북 경수로 지원을 남북경협 사업의 모델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남북대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일정기간까지 정부 관리 아래 추진한다는 확고한 방침이 서 있다.

② 기업의 대북한 진출

한마디로 컨트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의욕이 왕성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남북경협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술 및 자본과 북

한의 노동력이 결합함으로써 남북한 상호 보완적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방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 하고 남북경협 분야에서 타기업에 뒤지고 싶지 않은 기업간 경쟁의식과 심지어 북쪽 고향에 투자하겠다는 의식도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기업의 대북 진출에 있어서 과당 경쟁이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과 정부의 협조 체제하에서 민간의 자율조정기구가 설립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한 교역과 투자관련 북한법제도의 미비로 당분간은 우리 기업들의 방북을 통한 대북 투자 사전 조사 작업과 위탁가공 교역만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북한의 김정일체제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 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남 경협 전략에 있어서 이 중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측의 공식 경협 제의에는 거부하나 물밑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는 경협의 제스처를 나타내고 있다.

공식적으로 권력 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유교적 색채를 띠는 '3년상론', 권력갈등설 등이 있으나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그의 건강이 회복되는 정도에 맞게 군부를 중심으로 아래로 부터 추대 분위기를 조성하여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보에 의하면 금년 4월 말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나 5월 제9기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이 전면 교체되는 시점에서 또는 10

월의 북한 노동당 창당 50주년에 즈음하여 김 정일이 국가주석직과 당총비서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북한은 대내외 정치에서 뚜렷한 양극성을 보이고 있다. 즉 대내 정치에 있어서는 인민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경제회생을 위한 개방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관련 그들은 또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친미 반한(親美反韓) 정책으로 급격한 변화는 회피하되, 북미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 및 국교 정상화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 측의 공식적인 경협 제의에는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와의 경협 및 대화 재개는 거부하였으나, 기업인들과의 경협은 추진하려 하여 매우 예측키 어려운 대남한 정책을 쓰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체제고수형 대외 개방을 추진하려는 까닭은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개방과 이에 따른 체제 와해에의 염려로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도 제한적 경제 교류·협력 정책에 그칠 전망이다. 실용주의적 경제정책 노선을 취해 무역 제일주의, 합영사업 및 차관 등을 통한 자본과 기술 도입, 과학기술개발 노력을 꺾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도 체제개혁은 수행하지 않는 제한적인 경제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나진·선봉지역만을 개방하는 그들의 부분적인 경제특구 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④ 북한의 경제상황

지속적 침체로 최근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실현하고 있어 북한체제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식량의 대량 부족, 에너지의 절대량 부족,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 및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원조와 조총련계 송금의 단절 등으로 인한 외화 부족 및 외채 증대로 대외신용도는 세계 170개국 중 167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최근까지 시행된 경제계획의 진전이 극히 미진하다는 것이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군비대화(軍肥大化), 주체사상으로 인한 선진 기술 도입의 경시와 지나친 비경제적 선전성 사업 과다로 인한 자원의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침체된 북한의 경제상황은 앞으로 북한을 대외적으로 개방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북한도 획기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통한 경제회생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⑤ 핵 투명성 및 경수로 건설

경수로 건설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 바, 왜냐하면 경수로 건설의 성공적 지원은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 및 통일 과정의 원활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북미회담 타결 이후 후속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 북핵 동결의 조건으로 북한에게 경수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정·기술 및 이에 필요한 대체 에너지

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남한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북한측과 직·간접적으로 대화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는 1월에 경수로 사업 기획단을 발족시켰고 경수로 건설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수로 건설 지원을 연계한 남북경협을 구상중에 있는 바, 약 10년 소요되는 경수로 지원 사업 추진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외 개방 일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중장기 전략의 골격을 세우고 그 세부 계획을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회담의 타결로 북한의 핵무명성은 일단락되었다고 하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실천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이 아직은 현실성있게 들리는 듯하다.

⑥ 남북대화

남북대화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방북 인사들의 신변 안전, 투자 및 과실 송급 보장, 조세 관련 분야에서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남북한 정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만큼 남북경협은 제한적이고 불안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남북대화 재개 시기에 관해 설왕설래하나 당분간 관망 자세로 일관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예측이다. 쉽게 재개될 수 없는 것이 김정일의 공식 권력 승계가 지연되고 이른바 조문파동으로 남북간의 감정대립이 첨예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측은 당분간 남북대화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마·일 등 대서방 국가와의 경제·정치·외교적 위상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일의 공식권력 승계 이후 북미 합의 사항의 진전에 따라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경수로 건 등으로 인해 급년 하반기 이후 남북한 실무급 예비 접촉 등 대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다.

⑦ 국민적 합의 도출

남북경협 및 통일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나타

<표 1> 95년도 경수로 지원 일정

내 용	시 기
미, 대북 무역규제 완화	1월 21일 이전
사용핵 연료봉 처리 협상	1월 17일 ~ 21일
대북한 지원 중유 전달	1월 21일
KEDO-북 경수로 공급 협상 개시	1월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회의	1월 31일 ~ 2월 4일
KEDO 발족	2월말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4월 21일 이전
KEDO 상업계약 체결	12월

나지는 않지만 그 진행과정의 이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여부다. 작년 「11·8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남북경협에 있어서 북한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자는 신중론자도 있었으나 다수가 정부의 현 남북경협 정책에 찬성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김정일 체제를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여, 이들과의 대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경우가 있었으나 (예: '탈미접북(脫美接北)'이라는 비판) 기업인들 및 대다수의 국민들은 환영을 보였다. 앞으로도 일관성있는 정부의 대북정책, 질서있는 기업의 대북 진출 및 북핵문제에 관한 북미 합의 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무난히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주변국가의 대한반도 관계

먼저 북미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현재 북미 회담의 합의 일정에 따라 북미간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산 상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등 대미 관계 개선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미국도 제네바 북미 합의 일정에 따라 대북한 규제의 부분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급변 조치는 부분적인 규제 완화에 그쳤으나 북핵 합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가 확대될 것이고, 미국의 대북교역도 개시될 전망이다. 북미관계의 개선이 남북경협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한국형 경수로가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측의 거부 표시

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경수로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로 한국형 경수로를 관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진출에 있어서 선(先)남북대화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북미관계의 개선은 남북 관계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일간의 관계 정상화도 남북한과 주변 4강간의 교차 승인의 마지막 측면이라는 점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북핵문제로 단절된 북일수교 협상이 지난 북미 핵회담의 타결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계의 구심점 부재로 정계 개편 구도가 어느 정도 잡히기 이전에는 북일관계의 극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 변수로서 일본 관서지역의 지진 참사에 대해 북한이 위로 전문을 보냈고 일본의 총리가 답신을 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북일수교협상 재개의 기미도 보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일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북일관계의 정상화는 남북경협에 상반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즉 북일수교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는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에서 탈피하게 해줄 수 있는 반면에 장기적으로 북일간의 경제적 관계 심화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개방시켜 남북경협 및 통일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다.

중국은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남북한의 무역 의존도 심화와 남북한의 경쟁·대립성을 이용하여 한반도 진출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 하에서의

경제 개방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 개방하는 데 있어서의 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증대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사실상 현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일방적인 경험활성화 조치와 이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로 남북경협에 대한 공약수가 부재한 가운데 자기 책임 하에서 추진되는 민간의 대북경협은 적어도 제3국을 통한 투자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남북경협에 있어서 중국 및 연변 조선족 기업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⑨ 외국기업의 대북한 교역

북한은 과거 구소련과 같은 구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이들 국가의 몰락으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과의 무역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점차 독일 등 유럽국가와의 교역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미국·일본·유럽의 국가들의 대북한 진출은 남북경협의 하나의 변수로, 남북경협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으나 북한이 이들 국가와의 경협이 활발할 경우 체제 와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체적인 효과도 상존되어 있다. 그 가운데 역시 북미경제협력의 진전 정도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가 가장 큰 변수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제한적인 대외 개방과 열악한 투자 환경으로 서구기업의 북한 진출은 중국의

개방 초기에 대부분 화교자본만이 대중국 진출한 예를 보듯이 한국기업의 진출 추이에 따라 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중히 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94년도 남북교역 현황

94년 남북간 물자교역 반출입 승인 실적은 2억 2,791만 달러로서, 93년의 1억 9,879만 달러에 비해 14.6% 증가하였다. 상반기에는 북핵문제에 예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위탁가공 교역이 급증하고 제한 승인 품목에 대한 교역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월평균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교역으로 반전되었다. 94년도 반입 및 반출 승인 실적은 각각 2억 295만 달러 및 2,496만 달러로 93년에 비해 각각 7.7% 및 143.2% 증가하였다.

대부분 반입 위주이나 94년도의 반출 증가율이 현저히 상승한 것은 작년 12월중 북미 핵협상 타결에 따른 대북 대체 에너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450만 달러에 상응하는 중유 1차분 5만톤을 반출하였기 때문이다. 승인기준으로 94년 총 남북교역 규모에서 우리나라의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81.2%에서 93년 94.8%로 증가하다가 94년 89.0%로 다소 감퇴되었다. 그 까닭은 위탁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의 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의 반출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우리상품의 북한 유입을 꺼려할 뿐더러, 북한이 외화부족으로 인하여 우리제품과의 물물교환 형식보

<표 2> 연도별 반출입 승인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 분	반 입			반 출			합 계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1991	328	92	165,996	40	48	26,176	368	140	192,172
1992	365	93	200,685	42	34	12,818	407	127	213,503
1993	478	87	188,528	76	39	10,262	554	126	198,790
1994	599	92	202,952	162	50	24,959	761	142	227,911

자료: 통일원

다는 우리나라로 반출하는 물품의 현금결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역의 또하나의 특징은 간접교역 방식 위주로 물자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91년에서 94년까지 남북교역에서 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선에 그치고 있다.

94년 1월부터 11월까지 통관 실적은 864건, 108개 품목, 1억 8,020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同期) 629건, 92개 품목, 1억 7,790만 달러에

비해 금액기준 1.3% 증가하였다. 품목별 반출입 승인 실적을 살펴 보면 반입 물품의 비율은 철강·금속류가 64.3%, 농림수산물이 16.9%, 섬유류가 11.2%의 순서이고 반출 품목의 비율은 섬유류가 54.1%, 화학제품이 23.8%, 생필품이 16.6%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94년도에도 위탁가공 교역이 급증하였다. 94년도 위탁가공 교역의 총 승인실적은 완제품 반입승인 기준으로 107건 1,637만 달러로서 93

<표 3 > 연도별 위탁가공 교역 승인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건수	반입	반출	합계
1991	1	23	13	36
1992	10	556	414	970
1993	44	4,385	3,611	7,996
1994	90	14,856	10,505	25,361

자료: 통일원

년도의 44건 438만 달러에 비해 3.7배 증가하였다. 94년도 업체별 위탁가공 교역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럭키금성상사가 67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물산 511만 달러, 대우 267만 달러 순이다.

남북한 교류 현황을 보면 남북 왕래실적은 예년에 비해 극히 저조하지만, 북한 주민접촉 신청 및 승인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11·8 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이후 경제 분야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Ⅲ. 95년도 남북교역 전망

전술한 남북경협 결정 요인들을 살펴 볼 때 95년도 남북교역은 남북간의 정치적 요인이 좌우할 농도가 짙다. 특히 김일성 사후 아직은 안개 속에 싸여 있는 북한의 정치 체제 구도가 확립되는 시점에서 남북간의 관계 전반에 관한 향방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성사가능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북한의 대외개방 부단이 적은 위탁가공 교역을 중심으로 경협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북한이 체제 유지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을 구현코자 하는 한, 남북경협은 북한 특유의 정치·사회 지배체제와 자존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과 범위 내의 경협이라야 실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불투명하고 남북간에 직교역체제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의 외화난과 수출물자의 부족 등 교역상 장애로 당분간 남북교역은 본궤도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을 수행하지 않는 한, 북한의 생산력 정체로 인해 남북교역이 현수준인 2억 3천만 달러를 크게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95년도에는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의 남북한 물자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중 위탁가공만은 활기를 띠어 5천만 달러(반입 승인 기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교역이 밝아질 전망이나 대북 경수로 지원 건설의 진전 사항과 연계되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북 직접투자는 남북당국간의 협의 및 대화를 통한 미비점 개선여하에 따라 개시될 것이기에 당분간 대북투자의 타당성 조사 차원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기존에 추진되어 온 남포공단 합작사업이나 나진·선봉, 금강산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공식 창구를 통한 경협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대북투자를 위해 필요한 투자보장, 청산개정, 분쟁 해결 절차 등에 관한 남북당국간 공식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 옥고를 기다립니다

1. 본지는 북한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실 글은 학술 논문이나 시사성있는 글로서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2. 보내실 글은 본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본 연구원의 동의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
4.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 독자 의견도 실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 『통일경제』에 실린 글들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관해 제언하고 싶은 독자께서는 원고지 양식으로 저희 통일경제센터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 소정의 고료와 월간 『통일경제』 1부를 증정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 110-2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 737~4005

EAX : 733~8188, 9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원고 집필 기준

-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연구논문 : 80~100매 내외 - 시사특집 : 40매 내외
 - 이달의 초점 : 20매 이하 - 독자의견 : 10매 이하
- 원고는 '아래아 한글' 2.0판 이상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月刊「統一經濟」정기구독 안내

- ▶ 정기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온 라인 번호로 송금하신 후 전화 연락 주시면 됩니다.

TEL 737~4005(정기구독 담당자)

FAX 733~8188, 9

- ▶ 연간 정기 구독료는 60,000원입니다

외환은행 061-13-40879-9

예금주: 現代經濟社會研究院

月刊 統一經濟 1995. 2. 통권제2호

통권 제2호

등록번호/ 라 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5년 2월 15일

편집 및 발행인/ 김송웅

편집위원/ 장순원(위원장)

김용호, 남궁영,

전홍택, 어병두

편집주간/ 최주섭

발행처/ 現代經濟社會研究院

110 270

서울시 중구 개동 140 2

대표전화 (02) 737~4005

F A X (02) 733~8188, 9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 636~0555

정가: 6,000원

본지는 한국경제문예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건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의 연재를 금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편집의 책임부담과 저작권, 본 연구원의 결핵을 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